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2. 5. 3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5월 31일(수) 14:05~17:5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송 창 영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00호 『국민연금의 한국전력 발행주식 소유한도 재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101호 『메리츠증권(주)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2호 『유안타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3호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증권사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와 관련해서 개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비즈니스상 불가피한 어떤 할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증선위에서 제시한 바가 있음. 그것에 비추어봤을 때 왜 이것이 개인적인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

- (보고자) 투자비중은 잔액인수확약 체결 전에 메리츠증권(주)이 0.65% 투자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것을 외부에 안내하는 내용이 있음. 잔액인수확약과는 상관없이 주기관투자자가 99.4% 투자하고 메리츠증권(주)은 단독펀드 해지 회피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잔액인수라는 형식을 입혀서 투자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또한, 동 건은 OOOOOO투자운용(주)이 이 건과 관련해서 이미 금융위 조치를 받은 바 있음.
- (보고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OOOOOO투자운용(주) 조치 시 대체은행이 설정한 펀드가 34개이고 그중에 잔액인수를 맺은 건은 3건이 있었음. 그중에 1건은 OOO증권이 OOO억 원을 실제로 잔액인수로 계약을 하고 O억 원의 잔액인수수수료를 받고 매매각한 바 있으며, 나머지 2건이 본안 사안임.
- (위원) 회사 측에 준 것이면 회사 쪽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런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의 할인(discount)이 아니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의을을 하는 근거가 있는지?
- (보고자) 잔액인수계약의 필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모단독펀드 해지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 수단을 활용한 부분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근거로 본 사안임.
- (위원) 이전의 전례에서 이런 수수료 형태로 회사에 송금해 준 것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해서 제재한 사례가

있는지?

- (보고자) 있음. OOOO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인수하면서 미국 현지의 자산운용사와 수익증권 매매각실적과 연관된 금융주관전문계약을 체결한 뒤에 매매각 금액이 계약상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자문계약 형태로 자문수수료를 주고받기로 했음. 이에 따라 OOOO자산운용으로부터 OOO증권(주)이 돈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 (위원) 전례가 있다고 하시니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저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는 금감원의 의견을 존중하겠음. 다만, 돈을 받았든지, 깎아줬다든지, 이런 것을 무조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으로 의율해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전형적인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할인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서 제재조치를 부과할지 말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04호 『한국포스증권(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5호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의 분할승인 및 (가칭)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이 2개사(社)로 분할이 되면 1그룹1사 원칙은 고수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9군데 정도 있음.

- (위원) 이번에 이렇게 되면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이 2개로 가는 것이고 각각 업무는 겹치지 않도록 한쪽은 대체투자, 한쪽은 금융투자로 가는 것 같은데,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이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지 않은지?

- (보고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은 증권펀드 중에서 가치투자펀드를 중점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임.

- (위원) 그러면 이 분할 이후에 존속법인 한국투자신탁운용(주)과 뭐가 다른 것인지?

- (보고자)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종합이고 증권형펀드 ETF, 인덱스펀드를 하고 있음.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은 증권펀

드 중에서 가치펀드만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업무전략이 달라서 차별화되고 있음.

○ (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에 인가할 때 그렇게 업무범위를 제한해서 줬는지?

- (보고자) 그때 10년 투자철학을 기초로 해서 저평가된 기업이나 배당이익이 매력적인 기업 등에 대해서 장기투자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해서 인가를 내줬음.

○ (위원) 그러면 한국투자신탁운용(주)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그러함. 기존에 2개사(社)가 있을 때도 문제라고 본다면 같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임. 그런데 이번에 심사할 때는 분할하는 회사 자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업무범위를 명쾌하게 조정했음.

○ (참여자) 물적분할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존 투자자나 주주보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여기 보면 '충분히 고지했다'고 나와 있는데, 고지한 이후에 기존 펀드투자자나 모회사의 주주들 차원에서 지분가치의 감소와 같은 효과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 (보고자) 지금 현재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 사전통지해 본 결과 모든 투자일임계약



자가 분할계획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확인이 된 상황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6호 『(주)쏘카의 [개별,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07호 『홍진기업(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08호 『덕일플러스건설(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09호 『(주)고양종합건설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20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구조보다는 평가점수가 높은 법인들의 지정점수를 조금 더 준다는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는 구조로 활용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전 제21호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조치 사전통지 내용의 충실화’ 부분 중 ‘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조치자 간 공모, 증거인멸이나 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음. 조치대상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한 조치가 자기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조치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조치이고 공모하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에 통지 내용을 제한하겠다고 하면 개선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 (보고자) 동기가 고의의 경우에 동기판단 근거 및 모든 증빙 자료를 사전통지서에 기재해서 보내면 피조치자한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기밀자료도 있어서 나중에 수사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 취지임.

- (참여자) 사전통지서(외감규정 제31조)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조치 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 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외대상은 증거자료 목록으로 외감규정상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 이외의 나머지 판단근거나 위반동기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적었을 때 만약 그것이 수사보완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면 기존처럼 간소하게 보내겠다는 취지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참여자) 그러면 판단근거나 위반동기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 줄 수는 있겠지만 형사사건이나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제한한다는 단서를 세칙에 남겨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임.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22호 『○○○○○○○ ○○○○ ○○○○(○○○) ○○ ○○○○ ○○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1안]에 찬성함.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자사주 처분은 사실상 경제적 실질면에서 신주 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

고 있는 만큼 종래(從來) 제도로는 방지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음.

○ (위원) 저도 [1안]에 찬성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10호 『(주)휴먼엔 등 3개사 주식 등에 대한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펀드는 민법상 계약관계의 조합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것이 부과대상 적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음.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나 하면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계약을 해지하면 존속하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도 없고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한 업무집행조합원이나 당시의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실효성면에서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임.

- (보고자) 민법상 조합에 대해서 조치를 한 부분은 과거 조합원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많으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모두 다 본인이 특별관계자에 해당되고 법

룰에 따른다면 각자 본인이 특별관계자 입장에서 5%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되는 상황임. 그렇게 제출했을 때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투자자들의 어려움도 있었던 부분 때문에 조합을 대상으로 조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합의 조치에 대해서 정당하나, 적법하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업무 집행조합원이나 대표조합원을 조치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11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법률대리인임. SPC는 별도의 실체가 없는 단순한 '투자목적기구'일 뿐이며, SPC의 사채권 또한 독립적인 자산의 실질이 없어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음. SPC의 사채권을 시리즈 규정의 '기초자산'이라고 볼 경우, 펀드 발행 회사마다 다른 SPC를 설정하고 그 사채권을 펀드자산으로 편입하는 방법으로 시리즈 규정을 간단히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시장에 줄 우려가 있음. 시리즈 규정을 적용하려면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이 있어야 함. 그

런데 본 건 펀드는 각각의 설정시점마다 그 시점의 투자 수요에 대응하여 설정되었으므로,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 하에 설정된 펀드가 아님. 시리즈펀드 목록에 따르면 서로 다른 판매사가 판매한 다수의 펀드가 같은 시리즈 내에 포함되어 있음. 이는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 즉, 판매사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음. 다수의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합산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2021년 2월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었음. 공모규제 회피 의도 등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2021년 2월9일 이전에 설정된 다수 펀드의 수익증권을 시리즈펀드로 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소급적용에 해당됨. 본 건에 적용되는 기준은 본 건뿐만 아니라 본 건과 유사하게 펀드를 설정한 모든 운용사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 됨. 그 기준에 대해 말씀 올리겠음. 먼저, ‘동일한 SPC의 사채권’을 어떠한 근거에서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서 시리즈펀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펀드를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운 다음 해당 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 고발 등 엄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그때그때 사회적 물의의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서만 시리즈펀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실 경우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혼란은 결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발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위원) ○○○○○○○○○(주)이 2017.8월 외부 로펌이 해외 SPV가 발행한 Note를 취득하는 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6개

월간 합산하여 49인을 초과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문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진술인) 관련 자문의견을 받은 적이 없음.

○ (위원) 그 자문의견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 (진술인) ‘어떤 기준으로 시리즈펀드를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러면 2018년 5월1일, 소위 미래에셋방지법 시행 이후에 설정된 펀드 중 지적대상이 된 것이 다수 있는데, 그와 같은 펀드 설정 행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내부의 고민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는지?

▶ (진술인) 펀드 설정 당시 금감원이나 금투협회 등에 문의를 하였는데 특별히 명확한 기준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자체적으로 살펴보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는지?

▶ (진술인) 살펴본 증빙이 제출된 바는 없음.

○ (위원) 이 건 해외 SPV가 발행한 Note에 투자를 한 펀드와 관련해서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진술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기존에 ▲▲▲▲▲▲▲와 ☆☆☆☆☆☆☆☆☆처럼 완전히 동일한 자산이라면 당연히 조치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 (위원) 완전히 동일한 것이 무엇이 동일하다는 것인지?

▶ (진술인) ▲▲▲▲▲▲▲ 건의 경우에는 해당 빌딩의 대출채권이라는 단일자산이 있었음. 그리고 ☆☆☆☆☆☆☆☆☆의 경우에는 무슨 회사의 몇 차 회사채라는 단일자산이 있었음. 그리고 본 건의 경우에는 대출 플랫폼이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고 그 아랫단에 다수의 대출채권이 존재함. 그래서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별차주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자산을 보시는지 아니면 대출 플랫폼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을 보시는지 아니면 맨 윗단의 사채권 기준으로 보시는지, 사실 지침이나 혹은 금융행정지도에 의해서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음.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지침을 시장에 제시해 주시면 시장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으로 생각함.

○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관련 지침은 이미 편입한 자산이 사채권인 경우에 발행법인이 동일한 경우에 거의 같은 기초자산으로 본다는 관련 지침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침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 (진술인) SPC 사채권 관련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동일한 증권과 관련해서 펀드에 편입한 자산이 사채



권일 경우 그 동일한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진술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예를 들어 실체가 있는 어떤 상장법인의 사채권이라든가, 그런 사채권이라면 저는 기초자산으로 인정을 하겠음. 그런데 본 건의 경우에는 사실 SPC 사채권의 독립적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고 투자목적기구, 말 그대로 도구에 불과한데 어떤 측면에서 기초자산으로 보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먼저 본 건 수익증권이 공모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거래통합규정 시행일 2018년 5월 이후에도 판매된 펀드가 저희 당행에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여부가 핵심이고 그 기준에 따르면 본 건 펀드는 각 수익증권의 발행이 상호의존 관계에 있지 않아서 단일한 자금조달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즉, 이상 본 건은 통합규정의 소급적 적용이 안 되고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모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임. 다음은 주선인 쟁점(issue)임. 주선인과 판매회사는 그 역할과 성격에서 분명히 구분됨. 즉, ●●●●●●●●은 이 건에 있어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단순판매행위만 수행했고 판매수수료만 수취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발

행인을 위해서 모집 등을 하는 주선인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주선인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증권신고서 중 중요한 부실기재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증권신고서 미제출은 주선인의 행위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선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및 권한이 없으므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서 감액되어야 함. ●●●●●●●●은 펀드운용사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과징금은 0원이라고 할 것임. 즉, 당행은 발행인인 펀드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판매수수료만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과징금은 0원이라는 의미임.

- (위원) ‘주선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및 권한이 없으므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유로 주선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가가 불가’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은 진술인이 주선인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것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로 보임. 진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 금감원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49인 초과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증권신고서 제출을 해야만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발행인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음. 따라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주선인이 같이 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임.

▶ (진술인) 방금 금감원 측에서 말씀하신 것은 신고서 제출에 대해서 판매사도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로 보임. 그것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음. 즉, 조치안의 내용. 조치원인사실의 내용을 본다면 현재 조치원인사실은 주선인은 모집매출을 함에 있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조치원인사실에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집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위반사실로 지적하고 있음. 즉, 조치원인사실에서 명시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는 발행인으로 명시를 하였고, 판매사인 ●●●●●●●●은 모집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위반사실로 적시하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기준인 제429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즉, 금감원 측에서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의 공동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지만 저희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생각함.

- (보고자) 과거 ■■■■■■■■■■ 판례에서도 지금 진술인들의 주장과 유사한 점이 판결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바가 있음. 당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서도 주선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결과였음. 판례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인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함.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금융감독원에서 지적한 7개 펀드에 대해서 각각의 펀드 보수가 전부 다 일정비율로 차이가 있음을 아실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음. 펀드 보수와 관련된 대목을 짧게 소개해 드리자면 같은 집합투자기구 내에서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증권은 서로 종류가 다름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판결문의 내용이 있었음. 이와 같이 보수 구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같은 종류 증권’으로 단정 짓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음. 아울러 그 판결의 추가적인 내용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와 관련된 개정 법률이 2018년 5월1일부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정한 펀드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도 판결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두 번째 쟁점이 되는 부분이 주선인과 투자자 보호 관련한 부분임. 투자자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도 과거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의 경우 판매사의 의무는 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명자료의 내용을 투자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는데 그친다,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판매사가 독립적으로 확인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이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자 보호 의무 관련해서도 조금 무리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임.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과요건 중에 ‘고의’ 또

는 ‘중과실’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됨. 사실 저희 ○○○○○○(주)에서는 최초 판매 당시에 이러한 ▷▷▷▷▷ 펀드의 순차적인 설정이 공모에 해당될 수 있고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책임까지 져야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당국에 조치를 했던 선례라든지, 구체적인 지침도 그 당시에는 없었던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초 상품 설정을 검토할 때 ○○○○○○○○○○(주)에서 본인들이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시리즈펀드 이슈(issue)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했었음.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이 된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정을 했음. 이와 관련해서 ○○○○○○○○○○(주) 실무자와의 통화녹취를 간단하지만 의견서에 제출을 해드렸음. 실무자선에서는 윗선에 건의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윗선에서는 아마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됨. 그래서 지난 번 자조심 이후에 저희가 정식 공문을 통해서 ○○○○○○○○○○(주) 쪽에 요청을 했음. 외부 법률검토 자료를 공유해 달라, ○○○○○○(주)에 공유하는 것이 비밀 유지 계약 등의 이유로 힘들다면 금융감독원에라도 공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역시 현재까지 전혀 답변이 없는 상태임. 자조심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과 오늘 말씀드린 추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당사에 고의라든지, 심각한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임.

○ (위원) 아까 말씀하신 법원 판결 관련해서 집합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님. 집합투자증권이 회사형인 경우에는 지분증권일 것이고 신탁형일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분류가 됨. 그래서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라는 것이 곧 자본시장법상 다른 종류 증권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의미 같은데, 어떠신지?

▶ (진술인) 자본시장법상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조항이 저희 의견서에서 말씀드린 제231조제1항임. 그에 비추어봤을 때 다른 종류의 증권이라 함은 판매보수 차이로 인해서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도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를 판단했다고 생각이 됨.

○ (위원) 이 법 개정이 있기 전에도 ‘같은 종류 증권’을 기준으로 모집 여부를 판단을 해 왔는데, 이것을 ‘같은 증권’이 아니라 ‘같은 종류 증권’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지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 증권’ 관련해서 저희가 인용해 드린 판결문을 보시면 이것이 개정된 자본시장법 조항은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고 같은 종류인지 동일한 증권인지는 개념상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음.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네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먼저,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다는 점임.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부과과징금은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로 제한됨. 이때 용역제공수수료란, 발행인을 위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의미함. 그런데 당사는 펀드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및 보수만 취득하였을 뿐 발행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없으므로 용역제공수수료는 없게 됨.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도 발생되지 않음. 설사, 용역제공수수료가 '0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동종의 원인사실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도 각 건별 과징금 합산방식이 아닌 건별 과징금 중 최고액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과징금 감액 조정이 필요해 보임. 마지막으로 펀드판매 당시 거래 실무 등을 고려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펀드판매사로서 전체적인 펀드의 판매계획 등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음. 당사는 대상 펀드판매 당시 시장에서 거래실무 및 당사 내부규정에 준수하여 판매절차를 진행하였음. 또한, 당사는 ○○○○○○○○○(주)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기반하여 판매를 진행하였고 당사가 판매한 펀드에 관해서만 자료를 제공 받았을 뿐 전체적인 펀드의 판매계획에 대해서도 알기 어려웠음.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당사가 대상

펀드를 판매할 때 대상 펀드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으며 이와 같은 점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상 펀드에 ‘같은 종류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과거 발행목적, 수익구조, 발행 시기, 발행방법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종류 증권’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N증권의 제제조치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 펀드판매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당사는 판매시점 당시 내부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운용사가 아닌 펀드판매사로서 펀드의 전체적인 판매계획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 (참여자) ◆◆◆◆◆◆◆(주) 같은 경우에는 위반 시기를 보니 2018년 5월10일부터 2019년 4월18일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2018년 5월1일 시행된 이후의 위반행위임. 법이 개정되어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그 법에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조심을 했었어야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주)에서 이 법 시행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추가로 검토하거나 어떤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는지?

- ▶ (진술인) 일단, 저희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해당 펀드는 동일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음. 당시



실무자들에게 저희도 전해 들었지만, 제출할 증거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에 들었을 때는 ○○○○○○○○(주)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에 시리즈펀드가 아니라는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음. 그래서 쟁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진행했던 사례임.

○ (참여자) 당시 ○○○○○○○○○○(주)으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리즈펀드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확답을 받거나 그쪽에 확인해 보거나 한 것은 없지 않았는지?

▶ (진술인) 당시에는 확인했었다고 실무 담당자들이 얘기를 했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에서 그 당시 검토한 내용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 그런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음.

○ (참여자)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용역제공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주)은 이 건 판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익을 보는지?

▶ (진술인) 펀드 판매를 해서 투자자로부터 선취수수료나 보수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익이 생김.

○ (참여자)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 보면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라고만 적혀 있지, 보수를 누가 지급하느냐는 것을 따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어떠신지?

▶ (진술인) 저희는 용역제공수수료가 규정의 형식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발행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용역제공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 과징금 부과규정은 침익적인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자한테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용역제공수수료에 넣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임.

▷ 네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다섯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1종뿐만 아니고 2종 수익증권까지 포함해서 ‘같은 종류 증권’이라고 조치를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음. 하지만 2종 수익증권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선순위 수익증권인 1종 수익증권의 8%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선순위, 후순위로 나누어서 선순위증권의 상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완충재의 기능을 하는 것임. 수익자가 다르고 상환 순위가 다르고 수익률이 모두 다른데 이것을 동일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편입되는 자산을 판매 당시에 미리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래 동일자산 운용 여부를 펀드 판매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사실관계 측면에서 고려해 주십사 함. ▷▷▷▷▷는 SPV Note의 발행 시기에 따라서 편입되는 기초자산이 다수의 미국 부동산 담보부대출채권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구성이 다르다, 그래서 공모 발행 문제는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음. 그리고

운용사의 검토 결과 시리즈펀드나 공모 규제 회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설명까지 해 주었음. 운용사에서 이렇게 설명한 이상 판매사 입장에서 전체 기초자산을 다 파악해서 시리즈펀드 여부를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어려웠다는 점, 장기간 사모펀드 판매되는 과정에서 공모 규제 회피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주)■■■■■■■■ 같은 경우에는 주선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선인의 역할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 펀드 판매 회사가 펀드 판매행위를 한 것은 청약을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주선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는 펀드에 관련된 규제의 기초를 허물어버리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동일증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임. 본 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을 판매사인 (주)■■■■■■■■이 알 수도 없었음. 그리고 2021년에 시행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자산이나 운용대상자산의 투자위험이나 수익구조, 손익구조에 대한 결정도 운용사가 담당하는 것이지, 판매사가 알 수 없는 사안임. (주)■■■■■■■■이 판매했던 >>>>>펀드의 경우에도 기대수익이라든지, 수수료, 보수나 비용 등이 모두 다 상이한 점이 있음. 따라서 동일증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본 건에서 (주)■■■■■■■■이 고의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과실’로, 이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로 과연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됨. 2019년 상반기에 본 건 펀드 판매할 당시에는 공모 규제 회피가 펀드판매사에 대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본 건과 같은 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도 운용사, 나아가서 판매사도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음.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희는 하고 있음.

- (위원) 사모펀드 판매하실 때 운용사하고 판매사 간에 해당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게 되는 최초 단계, 그러니까 그 상품을 판매사에서 인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용사가 프로모션을 하는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은행 지점에서 해당 사모펀드가 실제로 판매가 되는 것인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운용사에서 판매사에게 상품을 제안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주로 Email이나 또는 판매사에 찾아와서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하고 있음. 그 운용사가 판매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라면 판매사의 상품선정과정을 준수해서 전결권자의 전결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고 만약 운용사가 판매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판매사의 내부 기준으로 운용사를, (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재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무평가기준을 통과하게 될 경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판매사의 상품선정과정에 따라서 상품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전결권자의 전결을 통해서 상품을 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운용사가 제시를 하는, 최초에 먼저 프로모션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용사가 제시하는 그 펀드와 관련해서 판매사에서 “이런 펀드 정도를 가지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는지?

▶ (진술인) 상품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담당자가 검토를 함. 그리고 해당 팀장 및 부장과 논의를 하고 상품을 진행할만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상품선정협의체라는 것을 개최함. 그래서 리스크부서와 소비자보호부서를 포함한 각 부서의 위원들이 참가해서 회의를 함. 그 회의에서 점수화를 해서 평균 80점 이상이 획득되었을 때 상품 출시 진행이 가능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결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전결권자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리스크부서와 소비자보호부서의 합의를 거쳐서 전결권자가 판단해서 상품을 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운용사의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들의 판단을 거치는 그 과정에서 49인 정도밖에 안 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 역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일체 없는지?

▶ (진술인) (주)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PB고객층이 풍부한 은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구미에 맞는 형태로 상품을 역제안한다기 보다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상품들이 저희에게 제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역제

안을 할 필요가 사실 없음.

▷ 다섯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여섯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의 시리즈펀드라고 지적한 펀드를 보면 동일한 발행사가 발행한 Note이기는 한데 만기, 이율, 발행금액 등 조건이 매우 다른 상품에 편입한 펀드들임. 이렇게 조건이 다른 상품임에도 동일한 발행사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시리즈펀드라고 지적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조치를 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그리고 ◆◆◆◆◆(주)는 본 건 펀드에 단순 판매사에 불과함.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는 펀드의 발행사인 운용사가 제출의무를 부담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운용사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음. 그런데 해당 운용사는 ◆◆◆◆◆(주)에 펀드 판매를 위탁하면서 오히려 본 건 펀드들이 아니고 본 건 펀드와 다른 펀드들이 시리즈펀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 수를 합산해서 모집하라고 안내했음. 그래서 ◆◆◆◆◆(주)는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를 했을 뿐임.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지적대로라면 판매사에 불과한 ◆◆◆◆◆(주)가 운용사 의견도 무시하면서 일일이 법상 의무도 없는 펀드운용내역을 검토하여 기존 선례와 달리 동일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것인데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진술인) 본 건에서 ◆◆◆◆◆(주)는 그야말로 정말 펀드

판매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건과 같이 판매사로서 펀드판매를 한 경우에도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판매사의 지위를 펀드주선인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그러니까 판매사가 주선인으로서 동일한 의미인지, 그리고 만약 판매사와 주선인이 동일하다면 판매사가 어디까지 검증의무를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례도 없고 최초의 사례로 보여서 저희는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사가 주선인과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주선인으로서 점검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판매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무리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건 지적은 판매사의 점검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 판매사를 통한 펀드판매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어떠한 행위요건을 충족하면 주선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 (진술인) 주선인 개념이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발행인들이 실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모집행위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법문 자체가 ‘같은 증권’이 아니라 ‘같은 종류 증권’으로 되어 있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는 대분류, 소분류가 있지만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증권의 분류가 있음. 여

기에서 '같은 종류 증권'을 진술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최근에 개정된 제119조제8항의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저희 사항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초자산을 담는 것이면 예전에 있었던 '같은 종류 증권'에 다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주)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조건 등이 매우 상이해서, 기존에 따르면 이렇게 상이한 조건을 가진 기초자산을 동일한 증권으로 본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이렇게 기초자산이 상이한 것을 '같은 종류 증권'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 여섯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금감원에서 동일 법인의 채무증권에 해당하면 채무증권 발행조건과 무관하게 같은 종류로 본다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판단기준을 근거로 '같은 증권'의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채무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 증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소지가 있음. 그에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안), 종래에 비추어보면 종래의 범위보다는 좀 더 '같은 종류 증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판단기준(안)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금감원에서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를 통해서



2005년부터 채무증권의 경우 동일 법인이 발행하였다면 구체적 발행조건과 무관하게 '같은 종류 증권'으로 본다는 내용을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안내하여 왔음. 이런 판단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 증권'의 범위를 판단하여 원조치안을 상정하였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판단기준이 '같은 종류 증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구체화 된 같은 종류의 판단 기준을 검토한 바 있음. 새로이 검토한 구체화된 판단기준에서는 채무증권 투자펀드의 같은 종류 해당 여부를 펀드의 투자대상인 채무증권이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서 채무증권 세부유형이 일치하고 만기 차이가 6개월 이내이며 수익률 차이가 특정 지표금리 최고-최저 차이 이내인 경우에 '같은 종류 증권'으로 판단하고자 함.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형의 경우 보증·담보 여부, 주식관련 옵션 부여 여부, 금리 변동 여부, 채권 순위를 기준으로 한 유형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보증·담보 여부는 무보증채권, 보증채권, 담보부채권으로 구분하였고, 옵션 부여 여부의 경우 일반사채, CB·BW·EB, 이익참가부사채로 구분하였음. 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서는 확정금리부 사채와 변동금리부 사채로 구분을 하였고 채권 순위에 있어서는 선순위와 후순위로 구분하였음. 또한, 만기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같은 종류 증권' 판단 기준 중 발행인의 근접성을 유추적용하여 펀드가 투자한 채무증권의 만기 차이가 6개월 이내인 경우 같은 종류로 판단하였음. 수익률의 경우는 각 시리즈펀드의 모집기간 중 특정 지표금리의 최고-최저금리간 차이 이내인 경우 같은 종류로 판단하였음. 수익률은 각 시리즈펀드의 투자대상의 실제 발행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지표금

리는 해당 채무증권이 발행된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금리로 산출하였음. 일반적인 채무증권 발행금리가 '지표금리+가산금리' 방식으로 산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표금리 변동폭을 판단기준으로 하였음. 발행회차의 경우 발행회차를 판단기준으로 도입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동일 증권'으로 한정되어 공모규제의 적용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우려되었음. 이는 형식적으로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증권에 대해 공모규제를 적용하려는 시행령 제11조 및 제129조의2 입법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음. 아울러 규제 명확성은 만기수익률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발행회차는 판단기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공모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증권 발행인, 세부 유형, 만기, 수익률을 형식적으로 달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기 요건은 적용 배제할 예정임.

○ (위원) ○○○○○○○○○(주)은 '고의'로 판단했는데, '고의'로 판단하신 근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2018년 5월1일 공모규제를 명확히 한 미래에셋방법이 시행된 이후 발행한 모든 공모규제 위반 행위를 '고의'로 판단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음. ○○○○○○○○○(주)은 2017년 8월 동사 펀드에 대해 증권신고서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외부로펌 자문결과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의견과 달리 49인을 초과한 시리즈펀드를 반복하여 설정하였으므로 법규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8년 5월1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모규제의 내용 및 제재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불명확

하여 위반행위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조심 및 증선위의 既논의 결과를 반영하였고, 2018년 5월1일 이전 위반행위의 위반동기는 '중과실', 2018년 5월1일 이후 위반동기는 '고의'로 판단한 것임. 아울러 ○○○○○○○○○(주)은 2017년 3월 미래에셋 공모규제 회피사건 조치 이후 총 230개 펀드를 설정하면서 2017년 5월에서 2019년 5월, 2년간 설정펀드의 대부분을 시리즈펀드로 설정하였고, 법규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미래에셋방지법이 시행되어 관련법 제도로 명확해진 이후에도 약 1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시리즈펀드를 68개, 5,401억 원의 규모로 반복적으로 설정하는 등 공모규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고의'로 판단한 것임.

- (위원장) 제111호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이번 조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원안대로 같은 종류의 채무증권을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증선위 조치선례와의 상충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금감원에서는 채무증권의 유형, 만기, 수익률 등을 고려하는 같은 증권 판단기준을 보고하였음. 증선위는 이를 수용하고 이번 조치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함. 또한, 증선위는 제재대상 주선인에 해당하는 펀드판매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에 따라 펀드 발행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따라서 동 조치안에서 개별 펀드의 판매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판매사가 운용사와 펀드 발행조건 등에 대해 실제로 협의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바, 일부 입증이 부족한 경우는 이번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사안에 대한 조

사 등 업무 수행시 이점을 유념하여 협의입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주), (주)■■■■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 대표이사 ●●●에 대하여는 과징금 7,630만 원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에 대하여는 18억 7,570만 원, ◎◎◎◎◎(주)에 대하여는 3억 4,640만 원, ●●●●●●(주)에 대하여는 4,790만 원, □□□□(주)에 대하여는 3,130만 원, ◆◆◆◆◆(주)에 대하여는 1억 4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기로 수정의결함.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52호(2021)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자조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증선위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준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음. 위원님들 간 의견의 합의도 이미 형성되었음.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제252호(2021년)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이번 조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치안의 적용법조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음. 먼저, 금감원은 동건 부정거래혐의에 대해 법 제178조제1항제1호 이외에 제178조제2항을 함께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는 제2항의 '위계'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유인 목적'을 요구하고 있음. 본 사안의 통정매매 과정에서 혐의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78조제2항은 조치근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한편, 법 제1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용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특히, 동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모두 포함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금융위 소관과와 금감원, 거래소 간에 협의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 취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관련 안건 처리시 보고해주시기 바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53분 폐회)